

2016년도 한국경제학회 춘계좌담회

## 한국경제의 현재, 미래 그리고 정책

김 광 두 (서강대학교 석좌교수)  
김 인 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 인 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이 만 우 (국회의원)  
이 지 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진 념 (전 경제부총리)  
하 성 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

### [알 림]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은 2016년 3월 25일 개최된 「2016년도 한국경제학회 춘계좌담회」의 내용을 녹취·편집하여, 2016년 4월 한국경제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경제포럼』 제9권 제1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이 좌담회 녹취록을 포럼 원고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하였고, 발표자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한국경제포럼』 편집위원회에서는 춘계좌담회 원고를 재편집하여 별쇄본으로 재배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학회



## 한국경제의 현재, 미래 그리고 정책\*

김 광 두 (서강대학교 석좌교수)  
김 인 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 인 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이 만 우 (국회의원)  
이 지 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진 념 (전 경제부총리)  
하 성 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 ○ 한국경제학회장 조장욱

오늘 좌담회는 참석하신 분들의 평소 생각을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학문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가 놓여있는 현실을 진단해보고 어떤 정책이 좋을지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 좌담회에 오신 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모셔서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해도 차고 넘치는 분들이지만 함께 모시는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흔쾌히 참여해 주셔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좌담회 사회는 서강대학교 석좌교수이신 김광두 교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좀 더 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한마음으로 모으자고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평소에 많은 연구를 통해 좋은 정책을 제시해 오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고,

---

\* 본 원고는 2016년 3월 25일, 서울힐튼호텔 아트리움에서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하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한 2016년도 한국경제학회 춘계좌담회 내용을 좌담회 형식으로 정리한 것임.

정책운영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지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좌담회는 우리 현실을 검토하고, 미래를 생각해 보고, 정책을 논의하는 구성으로 짜여 있습니다. 먼저 현재에 대한 평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차례로 돌아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진념 전부총리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 진 념 (전 경제부총리)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한국경제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소비와 투자 특히 수출 각 분야에서 경제회복력이 정체 내지는 후퇴로 가고 있고, 기업인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은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현실 경제에 대한 인식도 서로 엇갈리기는 하나, 너무 안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대응도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현상적이고 뒷수습에 가까운 대책들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이 끝나면 내년에는 대선경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의 경제 선점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그러니까 경제상황은 엄중한데 대응이 미흡하고, 올해와 내년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즘 국가가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경제학자들을 대표해서 일을 해 오신 이만우 의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 이만우 (국회의원)

진념 전부총리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2012년부터 우리나라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거시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이 201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엄중한 것 같고, 회복될 기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당국에서는 진단은 잘 합니다만 대처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4대 부문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항목별로 보면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온도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더라도 정부의 대응이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근에 세계경제가 어렵다 보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분간은 이런 어려움에서 헤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획기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뒷받침해야 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은 골든타임을 놓쳤고,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되는데 노동력의 고령화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수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문

제 등에 쏟아 부었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또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을 제고해야 되는데 교육개혁 등을 보면 아직 매우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저성장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여러 석학님들의 지혜를 모으고 유능한 젊은 경제학자 여러분들의 좋은 견해를 기대하겠습니다.

####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다음으로 금융 부분인 중앙은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하성근 위원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 하성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은행은 매달 금리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이 잘못 전달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토론의 장이 한국경제학회에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유한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물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좀 더 길게 보면 세계경제의 거품붕괴가 일어나면서 각 나라마다 거품붕괴의 후유증을 이겨가는 방법이 상이합니다. 그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도 이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이해가 맞아 상생하는 모드였지만, 지금은 서로 견제하고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는 험한 경제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의 거품이 꺼진 상황에서 헤쳐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쉽게 열매를 뺏던 부분들이 지금은 어렵게 되었고 중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대외적인 도전은 거품붕괴를 헤쳐 가는 것을 어렵게 하는 복합적인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합심을 해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서서히 오는 것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뭔가 합심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과감한 단기대책도 세워야하는데, 서서히 오니까 의심스럽고, 경각심도 생기지 않아 서서히 가라앉아 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의견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참 어렵다’라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김인준 교수께서는 혹시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 ○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

지금 세 분이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취해야 할 단기적인 정책 과제와 장기적인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먼저 단기적인 정책 과제에 대한 것입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또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원론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세계경제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장기간 침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과제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위해서는 역시 적극적인 금융과 재정정책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회복에 역점을 두고 확장정책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유럽과 미국은 재정절벽으로 인해 경기부양을 중앙은행이 홀로 담당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도 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 부양정책이 결과적으로 한계기업을 연명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편 경제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거시안정정책의 역할 분담과 함께 금융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유형의 금융시스템 위험에 대해 항상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성근 교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산시장의 거품이 붕괴해서 나타나는 위험인데, 위험도 크고 피해도 크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선제적인 대응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경제의 충격과 대외 부분의 불안정에서 나타나는 시스템 리스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니다. 세 번째 위험은 금융권 간의 상호 연계성과 그림자 금융에서 발생하는 시스템적인 위험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대규모 금융지주회사,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를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s: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로 간주하여 이들이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성장이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고용성장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창조적 파괴를 통한 노동과 산업 분야 경제구조 개혁, 그리고 마지막으로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technology), FT(financial technology) 등 지식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지순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 이지순 (서울대 명예교수)

첫 번째 세션은 경제의 현실에 대한 것인데 저 역시 매우 어렵다는데 동의합니다. 성장, 고용, 우리나라 국제경쟁력 어느 면을 보더라도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은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직 위기 상황은 아닌데 위기로 내몰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경제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알아도 그것을 고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고칠 능력을 갖지 못하고, 아니면 우리 국민 특유의 ‘어떻게 잘 되겠지’하고 있다 보면 틀림없이 위기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참고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이를 보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위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나눠 드린 자료를 보면 산업 경쟁력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데 새로 성장하는 산업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표 1>은 1990년부터 5년 단위로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10대 주력 수출 품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상품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반도체는 1995년도에 1등인데 2015년에도 1등입니다. 이것을 자랑해야 될지 아니면 걱정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만큼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정말 잘하는 품목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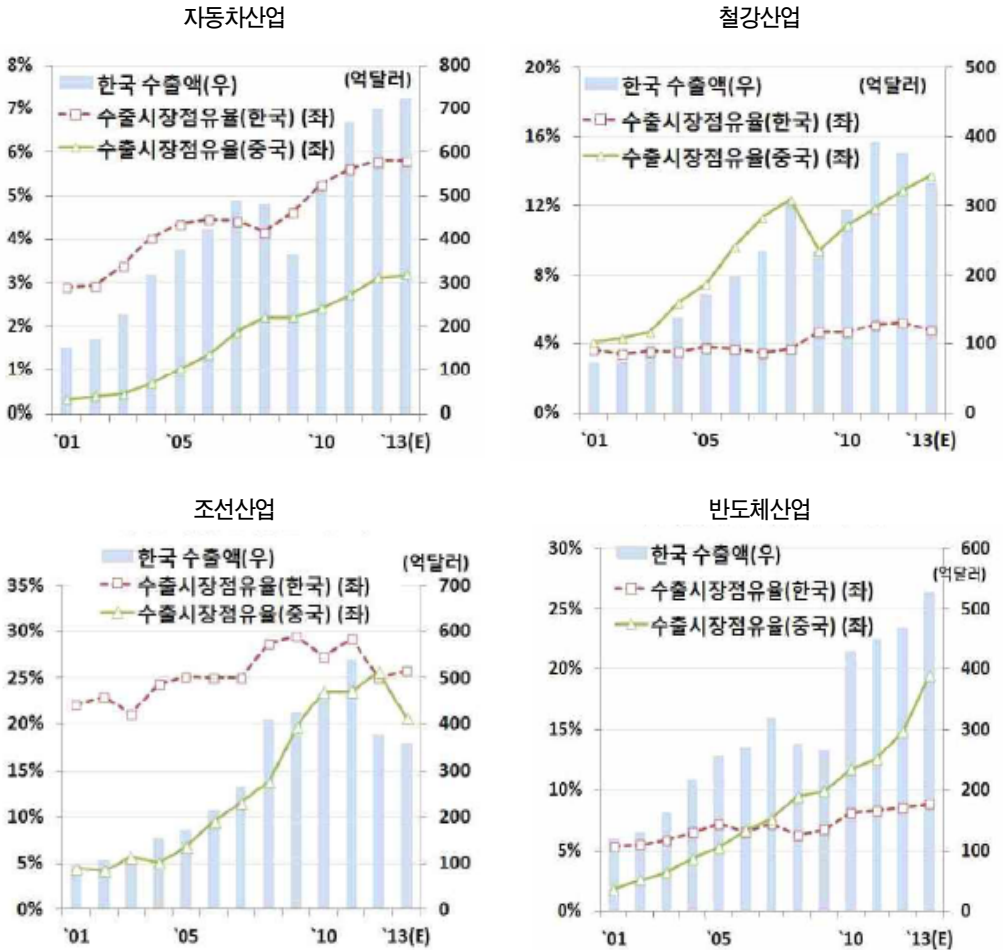
<표 1>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품목 변화 추이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	의류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2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자동차	조선	자동차
3	신발	조선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조선
4	영상기기	인조장 섬유직물	석유제품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5	조선	영상기기	조선	석유제품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6	컴퓨터	전자응용기기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7	음향기기	컴퓨터	합성수지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8	철강판	의류	철강판	철강판	합성수지	합성수지
9	인조장 섬유직물	철강판	의류	자동차부품	철강판	철강판
10	자동차	합성수지	영상기기	영상기기	컴퓨터	플라스틱제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MTI 분류체제 3단계 기준.

다음 <그림 1>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전 세계 수출 비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같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바뀌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이걸 쫓아갈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림 1> 한국과 중국의 산업별 전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출처: 현대경제연구원(2015.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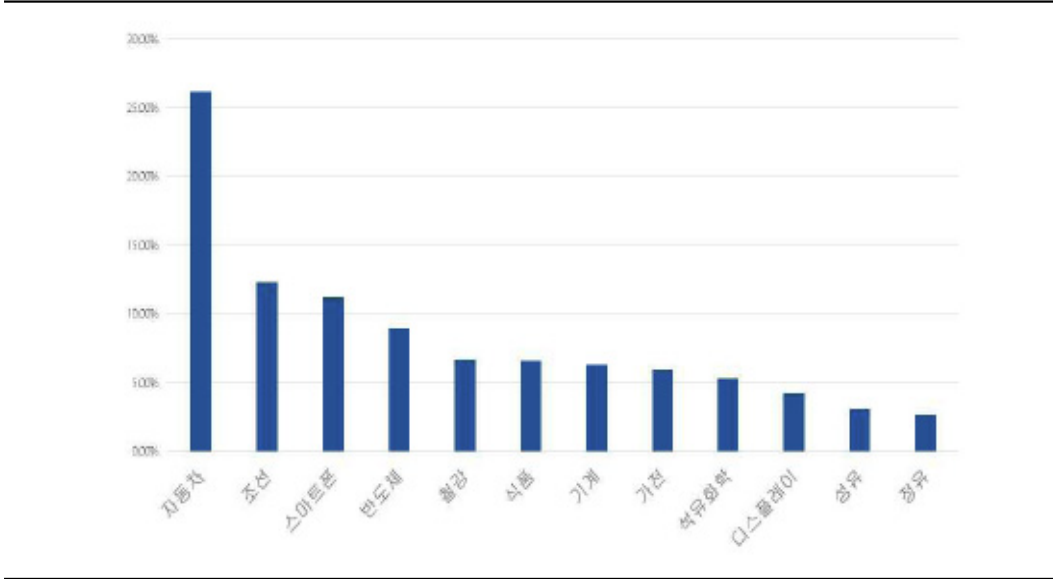
철강산업을 보면 중국이 한국을 앞지른 게 벌써 꽤 됩니다. 물론 포스코나 한국의 철강기업에서는 제품의 질적 수준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이러한 품질 우월성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조선산업을 보면 최근까지 거의 따라잡혔다가 약간 리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산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산업을 보면, 우리 생각에는 한국 반도체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는데 반도체 시장의 세계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한국을 능가한지가 꽤 오래 됩니다. 물론 삼성은 반도체의 종류나 품질 수준이 중국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중국이 추격해 오는 것을 보면 선두자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몇 가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조사한 결과인 <그림 2>를 보면, 우리 국민 중에는 이상하게도 자동차가 제일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자동차가 현재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동차산업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림 2> 빅데이터로 보는 주력산업 위기 인식



다음 <표 2>는 내·외국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시각을 조사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위기의식에 대해 내국인은 매우 강하고 비관적인 미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무슨 소리냐. 한국 위기 가능성이 낮다. 그렇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내국인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외국인들은 ‘아니다. 강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비생산적이라는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외국인은 오바마 대통령 연설에서 보듯이 한국 교육이 잘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능한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재벌체제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지나친 정부주도, 과도한 규제, 필요 없는 경쟁제한 조치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에서 보면 단기적이고 양적 성과위주의 평가시스템이 문제라는 것이 내국인들의 평가이고, 외국인들도 단기 성과위주의 평가방식이 지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전략을 책임질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이 모두 크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표 2> 내·외국인 전문가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각 비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위기의식	강함, 비관적인 미래관	위기 가능성 낮다고 보고 극복할 것
중국 변화	두려워 함	기회가 된다고 봄
전반적 평가	약점이 더 많다고 여김	강점이 더 많다고 인식
교육	비생산적이라고 여김	뛰어난 교육 덕분에 우수한 노동력을 갖게 되었다고 봄 창업생태계 미발달
정부역할	무능한 정치권과 정부 재벌 체제의 부작용	지나친 정부주도, 과도한 규제 및 필요 없는 경쟁제한
노동시장	노동시장 경직성	노동력 증가세 둔화
성과	단기 양적 성과 위주의 평가시스템 부작용	단기 성과위주, 미래전략 부재
공통인식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다음으로 김인철 교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

제가 시카고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은 ‘정책은 정치다(Policy is Politics).’라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주장이 별로 가슴에 와 닿지 않았 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6년에 공부를 시작해서 81년에 끝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순수이론과 계량적이고 수리적인 접근이 많았습니다. 시카고대학에서 발간하는 학술지가 Journal of Political Economy입니다. 그런데 이 학술지가 1892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4년이 된 거예요. 오랜 경험으로 보면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정치는 경제이고 또한 경제는 정치다’라는 주장이 상 당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러면서도 매우 다양해요. 그러나 해석과 견해가 다양한 것 까지는 무난한데 문제는 다양한 것을 넘어서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경제가 혼돈 상태에 있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거시적으로 보면 물가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또 무역 흑자이고 또 저성장이라고 하지만 우리보다 더 못한 일본이나 유럽은 더 성장을 못하고, 글로벌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 우리 거시경제는 괜찮은 것 아닌가 요. 그렇지만 사실은 모두가 느끼는 게 그런 지표상의 안도보다는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지금 사그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장 동력과 잠재 GDP를 높이기 위해 채근을 하면, 과거처럼 그렇게 높은 성장률은 이루지 못 하겠지만, 희망적인 건 희망적이라고 보고 또 잘못되고 있는 것은 지적을 해서 고쳐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 경제를 볼 때,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

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고맙습니다. 서론 부분을 이제 했는데요. 지금 우리 현실을 분석하는데 조금 더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채에 대한 말씀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3대 주체인데, 모두가 부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채문제는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다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는 현재 1,200조를 넘어서고 있고, 연구결과에 따라서는 은행이 충분히 충당금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정부쪽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그 충당금은 단순히 가계의 일부, 즉 취약가계 일부가 문제될 때만 괜찮고 문제 가계의 범위가 넓어지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성근 위원께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 ○ 하성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깊이 있게 준비를 못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조금 특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계들은 저축의 어떤 한 형태로서 집을 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차입을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장기저축의 성격이 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부채의 경우 집값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나 정부는 국민의 자산관리 차원에서 더 신경을 써서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너무 거시지표와 비교하고 우리의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해서, 다른 나라 수준과 맞추기 위해서 냉각시키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주택경기를 부양시키는 것도 위험하니 적절한 줄타기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지만, 이를 질적으로 통제하고 심사도 강화하면서 지나치게 냉각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적정수준으로 이끌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우리의 리스크 관리 중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현직 금통위 위원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물러나시면 좀 더 솔직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가구 금융순자산이 마이너스 그리고 자기 가처분 소득 중에 40% 이상을 부채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가구가 안고 있는 가계부채가 400조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히 넘어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직에 계실 때는 이런 문제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국가 경제를 오랫동안 맡아보셨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념 전부총리, 가계부채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 ○ 진 념 (전 경제부총리)

가계부채 문제는 하성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가치 유지와 관련된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니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점과 지금 부동산경기 진작 정책을 계속 썼지만 이제는 주택보급률이 105% 넘어서는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부동산 가격은 정체 내지는 하락할 수 있다는 문제와 연결시켜 보면 만만한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을 늘리는 건데, 이 점에서 별로 진전이 없고 부채만 늘어나고 있는 상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를 좀 관리한다고 DTI와 같이 규제를 강화하면, 가계부채자가 제2금융권, 제3금융권까지 밀려나가기 때문에 이른바 풍선효과에 의해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업부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의하면 이자보상비율이 1을 넘어서지 못하는 기업들이 전체의 1/3쯤 된다고 합니다. 이지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철강산업 등의 산업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자보상비율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또 다른 폭탄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꾸 저보고 옛날 얘기를 하시는데, IMF 직후인 98-99년에는 막상 불이 났기 때문에 공적 자금을 받아 160조를 투입하면서 기업과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 한 후에는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만들어서 금융기관이 상시구조조정을 하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상시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는 은행장을 할 때 부채, 예를 들어서 부실기업이다 해서 정리해 버리면 충당금을 더 써야 하고 은행의 성과는 더 낮아지고 인센티브는 적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루고 미루면서 지금까지 와 있어요. 지금은 또 선거철이라 구조조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조조정하는 얘기 1-2년 전, 지금 정부 와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제도나 시스템이나 문화를 바꾼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항상 관리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지금 진 전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보상비율 1 이하인 상장기업이 1/3인데, 동시에 이자

보상비율 1 이하가 3년 연속 계속되고 있는 기업수가 1/3분에서 또 1/3입니다. 그 중에는 30대 재벌그룹에 속하는 기업이 17개가 들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호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과잉시설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기업부실 문제도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 두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나중에 정책을 얘기할 때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부채에 대해서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 분야의 연구도 많이 하였고 국회에서 이 분야를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이만우 의원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정부의 국가부채가 GDP의 35%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5일 현재 40%로 늘어났습니다. 말하자면 국가부채의 증가속도도 대단히 빠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 이만우 (국회의원)

아직도 절대수준은 OECD 평균 수준의 절반 밖에 안 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정부부채의 증가속도는 OECD 평균 증가속도보다는 갑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속도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적자재정을 편성해서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세수도 부족하다보니,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앞으로는 좀 더 세출 측면에서 효율화를 달성해야, 정부부채의 증가속도를 좀 더 낮추고 장기적으로 재정이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 거품 때문에 복지지출이 늘고, 우리 인구 구조상으로는 재정적자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길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작년부터 국세청에서 사전납세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납세의 정보도 사전에 제공을 해서 상당히 적자 폭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상황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금융 쪽의 역할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쓸 정도로 금융의 역할이 크지만, 우리는 항상 한발 늦게 가는 통화정책을 쓰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자본금을 늘려줄 여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금융부문에서 한은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은은 그런 점에서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은의 통화정책이 과거 인플레이션 시대의 사고에 너무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디플레이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펴서 우리 경제의 햇볕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또한 기업부채에 관해서도 중앙은행이 부채를 줄이는 역할에 대한 내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일부 악성 부채를 탕감하는 정책안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치적인 공약으로 볼 게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과거 정부가 외환위기 때 재정으로 160조의 공적 자금을 만들어서 위기를 타개한 적도 있습니다. 일부 악성 부채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미국은 페이고(pay-as-you-go) 법안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세출을 할 때는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 마련을 법제화하여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이 페이고 법안을 국회에 내놓았습시다라는 아직도 정부나 국회에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세출도 더 효율화시키는 방안 그리고 미국처럼 페이고 법안도 입법할 그런 시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말씀하시기 난처할 것 같지만 여기는 학회니까 얘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경제성장률이 올라가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성장률이 높이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고,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복지지출의 증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증세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요?

#### ○ 이만우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든지 불확실한 조항 축소와 같은 계획으로 적자재정을 매우고자 했지만, 이런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증세를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학회에서는, 이미 담배소비세도 올렸고 주세도 높여야하지 않느냐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1%만 올려도 적자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이런 정책은 통일을 대비해서 맨 마지막에 써야 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증세에 대한 국민 저항이 있지만, 음주의 사회적 비용이 높기 때문에 주세 증가도 20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증세는 해야 되는데 방법이 새로운 조세 중심으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 ○ 이만우 (국회의원)

우선은 그렇습니다.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 이만우 (국회의원)

모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표 떨어지는 소리라고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학회니까요.

○ 진 념 (전 경제부총리)

제가 재정절차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우 의원께서 작년에는 세수가 회복이 돼서 많이 좋아졌고 하셨는데, 경제활동이 좋아지고 경제가 성장해서 세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있던 불투명한 세원을 확보해서 늘어났느냐, 그 비중이 얼마인가가 과제죠. 증세 없는 복지라는 개념을 지키기 위해서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조사하면 그 다음에는 관세청에서 조사하고, 이게 기업의 경영 의욕을 굉장히 저해시킨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그냥 부채가 많다, 적다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는데 국가부채가 늘어나느냐 하는 내용을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령연금, 대학교 등록금 반값, 고등학교 2017년부터 무상교육 등으로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특히 한번 제도가 바뀌어버리면 부담이 계속 되는 겁니다. 재정적자가 늘더라도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투자할 돈을 앞당겨 투자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지금 보육시설 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보내려고 기다려야 하고 사립어린이집에 보내면 애가 다치느니 맞느니 문제가 많습니다.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출산율 제고 정책하고 맞물려가기도 하는데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당첨이 되면 로또 맞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차피 정부가 투자할 바에는 좀 더 앞당겨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를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어느 면에서는 보육 시설 많아지면 결국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 성장 동력 확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놓고 나눠 먹기 식으로 운영하면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

가계부채와 영유아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계 금융자산과 가계 금융부채를 잘 대비해서 봐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에서 보듯이 가계 전체로 보면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개인별로 보거나 소득별, 연령별, 신용순위별로 볼 때 가계 금융부채가 가계 금융자산 보다 큰 사람들이 많으며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점이 제대로 파악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정책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빅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소득별, 신용순위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적합한 가계부채 대응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진념 전부총리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정부 재정지출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뒀어야 되는 것이 영유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지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현재 대학교 진학률이 70%인 상황에서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영유아를 믿고 맡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고용증대 문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3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해서 정부가 의무교육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도 높이고 고용도 늘리는 것입니다. 3-5세 의무교육은 저출산과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고용 증대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정책입니다.

####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부채에 대해 논의하다가 어디에 써야 되느냐로 옮겨갔는데, 이 부분은 후반부에서 더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김인철 교수께서도 부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 ○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규모가 큰지를 평가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보다는 부채증가의 내용, 특히 악성부채 여부가 중요합니다. 강남에 집만 사면 괜찮다고 해서 제2-3금융권에서 채무를 빌린 사람들은 지금 살기가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은기준금리나 은행금리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2금융권과 대부금리에 대한 연구는 많지가 않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논의할 때, 너무 규모에만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내용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꾸 정치적으로 너무 공방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연구를 해서, 나아갈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를 장기적으로 고쳐 나갈 수 있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 이지순 (서울대 명예교수)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부채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 지적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계가 빚을 내서 소비해도 좋다는 풍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국민들이 빚내서 소비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은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가계부채를 내서 소비해도 좋다고 부추겼기 때문에 풍조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자기가 일생 동안 거둘 소득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그 범위 내에서 갚을 수 있을 때 빚을 지는 것인데, 지금은 무리하게 빚을 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조장하는 것은 정책 책임도 있고, 금융기관들이 부추긴 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탕감해서 결국 자기 책임을 면해주기까지 하는데,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부채에서도 좀비기업들이 아주 많은데 아무도 손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역시 ‘어떻게 되겠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와 같은 무책임한 생각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만우 의원께서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도 공공 부문의 공적 자금 등 갚아야 할 책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지출 건전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낭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는 우리 같은 문외한이 보더라도 필요 없는 도로가 굉장히 많이 건설되고 있어요. 정부는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산적인 복지로 돌아설 필요가 있습니다.

###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좀 전에 가계부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구체적인 연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계가구가 지고 있는 빚이 약 400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한계가구 속에는 제2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과 영세사업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가장 취약하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정확한 숫자는 국세청, 신용평가회사, 신용정보회사 등의 도움이 필요하고, 한국은행과 국세청 간에 협조에 달려 있지요. 아주 정확한 통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좌담회의 전반부는 한국경제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체적으로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데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과 가계부채의 문제가 이미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국가부채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사회의 유연성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10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2부 시작

###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이제 좌담회 후반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앞으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주제입니다. 먼저 경제의 바탕은 산업인 것 같습니다. 이지순 교수께서 전반부에 제기하신 대로 우리 주요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의 미래 먹거리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의 스타트업 환경 자체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거기에서 좀 잘될 것 같다 하는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이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문제도 있습니다. 먼저 이지순 교수께서 산업경쟁력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지순 (서울대 명예교수)

우선 그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20년 동안 각국의 경제성장 발전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서 몇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를 비교하면서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힘이 뭘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역시 재산을 확실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는 내가 열심히 일한 소득을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산권이 보호되어야 되는데 재산권의 침해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각국의 사례를 보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심할수록 경제발전이 더딘 것이 관측됩니다.

두 번째는 산업경쟁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신생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 관행상 대기업이 와서 찬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가 관건입니다. 다시 말해 두 번째의 힘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진입장벽이 굉장히 많지요. 특히 기득권자들은 경쟁자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유를 억제하기 위해 정치력을 이용해서 진입장벽을 치지요. 또한 대기업들은 대기업들대로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공정하지만 치열한 경쟁 역시 필요합니다. 지금 아무리 잘하더라도 좀 소홀히 하면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출현해서 나를 도태시킬 수 있다는 위협이 있어야만, 개인이든 기업이든 나라든 계속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동안 성장능력을 상실한 것은 위 세 가지가 모두 후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떻게 돌려놓느냐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보다는 소비를 중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사람들이 옛날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뭐하나. 놀고 살자.’라는 말은 그럴 듯한 얘기이지만, 놀자고 하면서 경제도 성장하자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러다보니 근검

절약 정신에도 문제가 오고, 부지불식간에 자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강인한 자립 정신이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 이건 사회의 문제이니 사회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하고 연결해보면 우리는 똑같이 나누자는 1/n식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서 보면, 신용상태가 나쁘면 비싼 이자를 물리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비난을 받아요. 이런 풍조가 만연되면서 정부는 오히려 못하면 더 주는 분배방식을 쓰는데 이 역시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자. 매우 좋은 얘기이지만, 그것은 아무리 봐도 사탕발림에 불과합니다. 가장 문제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규제와도 관련되는데, 규제 시스템을 이번에 완전히 네거티브 규제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상황이 너무나 예상치 못하게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뭐만 할 수 있다고 해서는 도저히 새로운 것에 도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후발국들이 매우 빠르게 추격해 오는데 우리가 전에 했던 것만 해서는 이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어떠한 일을 하지 말라고 정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득권을 과보호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대기업을 정책적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기업은 그냥 두고 오히려 영세하고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하고,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잘하면 더 잘 도와준다는 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산업이 뭐가 있을까 조사해 봤더니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3D 프린팅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로봇도 있고 첨단자동차도 있지만, 의외로 농업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에는 백만장자만 해도 5,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들은 매우 안전하고 깨끗한 유기농 농식품을 먹고 싶어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같은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으면 그것도 신성장산업일 것입니다. 한편 중국도 고소득 고령층이 많아지고 있는데, 의료서비스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강점이 있는 ICT를 활용해서 꼭 현지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중국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규제가 문제라는 점은 다 같이 공감하는 점입니다. 정부에 제시하면서도 규제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성과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셨는지 진념 전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 ○ 진 념 (전 경제부총리)

규제(regulation)와 규율(discipline)은 명확히 구분해야한다는 것이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이지순 교수님 말씀처럼 규제는 가급적 풀어야하고, 오히려 지켜야할 규율은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재정의 규율도 옛날에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도 지킬 것은 지켰어요. 이것은 국민의 돈이니 아끼자. 이에 대해 예산실장, 과장, 국장을 대통령이 보호해 줬어요. 그거 보호 안 해주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고, 규율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난 정부 때 재정규율을 강화한다 해서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인 사업은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한다고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 4대강 사업은 왜 해줬느냐? 홍수피해, 재해대책, 국난과 관련된 유형은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4대강 사업을 홍수피해 사업으로 해서 집어넣어버리니까 5,000억짜리, 1조짜리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그냥 나가버리더라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규율은 제대로 지켜야 하고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규제를 완화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갖게 하는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문제로 결국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남발했다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신용카드를 권장하는 것은 새로운 금융수단으로서 영세자영업자의 신용거래에 길을 좀 터주고, 세원 파악이 어려운 곳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서 1년에 한 3조원 정도의 세수를 더 걷었습니다. 매우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금융위기 이후 1998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풀었던 말입니다. 풀어 놓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만원 주고 신용카드를 마구 발행해 버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왜 그런 것을 막지 못했느냐 한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나 그렇게 자율화했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남발한 신용카드 회사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소위 규제완화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그러니까 규제완화는 해야 되고 규율은 지켜야 되는데, 규율을 잘 안 지킬 경우에 규제완화가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이지요. 규제는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해당이 되는데 김인준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

우선 가계부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금융연구원에서 2년 동안 가계부채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 과정에서 부채에 대한 통계는 구축했지만 자산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자산에 대한 통계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얻어야 김광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공이 거시경제학이라 규제 감독보다는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산업 구조와 관련해서는 노동시장과 재벌구조 모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서로 상대방에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책임과 서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시장 구조를 보면서 70년대 미국과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AFL(노동총동맹)과 CIO(산업별조합회의) 등 노동조합의 힘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 시절 미국 대통령 이름은 기억 못해도 당시 AFL-CIO의 위원장 이름이 조지 미니(Georgy Meany)라는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막강 했던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노조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구조조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노동조합도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새로운 인적 자본의 양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 재벌구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구조는 아직도 재벌이 지배하는 중화학 공업과 장치산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싹든 좋은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산업과 지배구조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할 것입니다. 재벌 3세대 경영진이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의 창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산업과 노동 모든 분야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앞으로 포용 성장(inclusive growth)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술혁신이나 경제의 글로벌화 없이 우리 경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술혁신과 경제 글로벌화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소득 불평등 심화가 수요를 줄여 경기침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시장이 상호보완책을 채택하여 보다 균형 잡힌 소득분배를 향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적 자본 투자, R&D 투자,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일단 규제완화가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는 반드시 규율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기업의 기득권이 갖고 있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썩니다.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렵다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인준 교수께서 재벌 3-4세 문제도 제기했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적으로 창업주들에 비해 기업가 정신이 상당히 약하고, 관료주의에 휩싸여서 과감한 의사결정을 잘 못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스타트업을 책임지고 지원해 주는 대표적 기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전국에 17개가 있고 이걸 전부 재벌들한테 맡겨서 지역별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재벌 3-4세입니다. 여기서 도움을 받는 지원대상은 신규 사업자인데 재벌 3-4세의 인식구조를 고려해보면, 본래의 취지인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이 혁신센터를 통해 잘 성장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아쉽습니다. 아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성과를 평가할 수 없지만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국가미래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산업경쟁력 포럼을 7차례 정도 개최했는데, 그 중 잘 되고 있는 것은 화장품 산업입니다. 화장품 산업은 당분간 관촬을 것 같지만, 그 외에 전통산업들은 대부분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의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가 ICT 강국이라고 하는데 ICT의 부품산업은 거의 중국한테 추격을 당한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많이들 얘기하는 게 개혁 아닙니까? 지금 4대 개혁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왔고, 그런데 4대 개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4대 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정부가 내놓은 안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국회에 계시는 이만우 의원님이 4대 개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 이만우 (국회의원)

요즘 경기가 어려운 전통 제조업 분야가 집중해 있는 울산이나 포항, 구미 지역에 들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울산의 경우 조선업 분야에서 최근 배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석유화학 분야도 유가가 내려가고 그동안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들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이지순 교수님 말씀하신 자동차 산업도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되는 분들도 많고 노동시장도 어렵고 98년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밖에 있는 포항제철의 경우도, 중국의 과잉생산 때문에 철강 값이 부피로 따지면 생수보다 더 싸다고 말씀하시고, 구미에 있는 전자부품도 수출량이 근 3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장래를 보고 산업경쟁력을 본격적으로 다시 키워야 한다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대기업은 그래도 이미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요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19개 산업을 지정을 했지만, 아직도 창조경제에서 이 19개 분야가 대대적으로 자생을 하고 발돋움하려면 앞으로 수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빛을 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부문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4대 부문 개혁의 성과를 C학점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민

영화와 중복 분야 통폐합을 논의해야 하는데 지지부진합니다. 임금피크제나 공무원 연금개혁만 내세우고 있는데, 민영화 등 좀 더 내실있는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개혁도 협상이 결렬되었고, 점점 노동시장의 유연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개혁도 창의적인 교육과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직 걸음마 단계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금융부문도 양적인 성장은 2000년도 초반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지만, 규제완화는 아직도 선언적 의미에 불과합니다.

4대 부문 개혁은 앞으로 너무 별일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실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정부가 더욱 구체적인 실천방안, 단계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서 실천해야 합니다. 중국 경제가 바짝 따라오는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의 네거티브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측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훨씬 선진적이에요. 네거티브 규제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우리를 따라 옵니다.

### ○ 진 념 (전 경제부총리)

저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규제 문제로 돌아가면, 진입장벽 철폐라는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업이 된다 하니까 곳곳에 중소 조선회사들만 늘어서고, 이후에 무역보호, 산업은행, 은행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런 식의 진입장벽 철폐라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규제를 자꾸 논의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간다고 쉽게 정리를 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걸 하나하나 규제개혁으로 하다보면 공직자의 성격상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규제를 풀려고 하지 않아요. 겉모양은 규제를 다 풀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규제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보다는 신산업 분야는 규제가 없다는 식의 접근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 17개의 창조경제센터의 취지는 좋게 시작했는데 성과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건 긴 호흡으로 그 결과를 봐야지 지금 2-3년 내에 바로 성과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그리고 정부정책 당국자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라고 재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경제라는 것도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가장 비창조적인 방법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경제학회에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최근에 판교를 실리콘밸리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1990년대 말 IMF 이후에 벤처 붐을 일으켰다가 벤처가 문제가 있다 하니까 ‘혁신경제’로 그 다음 정부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녹색경제’로 갔다가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는 긴 호흡의 사업 추진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LPGA 선수들 굉장히 잘하잖아요. 1등부터 10등까지 거의 반이 한국 선수들입니다. 이런 성과가 정부에 여자 골프과가 있거나 특별한 돈이 가서 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지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그렇게 형성된 거라 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게 장

소 있고 건물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생태계가 같이 맞물려가면서 오늘날 실리콘밸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경제학회가 전세계의 생태계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런 속에서 우리 벤처산업이 배워야 할 게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경제학회가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창조경제라는 개념은 아주 잘 잡은 개념인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진 전부총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기적인 성과에 쫓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금융 쪽도 보면 금액은 매우 늘어났지만, 내용을 보면 85% 정도가 담보금융입니다. 기술금융의 본래 취지하고는 좀 다르고, 결국은 실적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잘되고 있다는 통계로 포장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창조경제 성과는 길게 봐야 되는데 너무 짧게 생각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뭘 만들 것인가와 연결이 되는데, 기존 산업이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이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생태계 문제도 있지만 이걸 할 수 있는 대기업 집단들은 위험을 피하려 하고, 제도는 마련이 됐지만 너무 서두르고 있고, 우리는 지금 미래의 앞날이 걱정스러운데,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가 정지된 상태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의사결정이 안 되고, 앞으로 나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4대 부문 개혁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우리 사회 지배구조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유연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충하기로 하고, 중고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과정을 2018년부터 집어넣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이를 위해서는 교사를 우선 구해야 되고 커리큘럼 속에 적절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이명박 대통령 때 녹색이라는 말이 나와서, 교과과정 속에 환경에 관련된 교육을 많이 넣어놨는데 그 대통령이 끝나니까 그거 없어지더라고요. 창조경제라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라고 하는데, 2018년에 다음 대통령이 나는 창조가 아니고 다른 거다 이러면 또 안 할 텐데 사전에 왜 투자하느냐는 거죠. 이런 사회지배구조에서 우리가 길게 보고 뭘 할 수 있을지 또 단기적으로 이슈가 생겼을 때 해결능력이 있는지 의견을 한번 나누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진념 전부총리께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진 전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할 때 정부에 쫓 계셨고 고도성장의 마무리 단계까지 경제정책을 봐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지배구조가 언제부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을 꺼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진 념 (전 경제부총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부문 개혁의 비전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여기 계신 교수님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사정 대타협이다 하면 무엇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인지 궁금합니다. 정년연장 법을 개정할 때 임금피크제 도입해서 같이 묶어서 처리하면 되는 걸, 그냥 정년연장 해놓고 그 뒤에 따로 임금피크제 도입한다는 것은 전략이 없다는 거죠.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 제대로 전략 수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면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이 무엇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을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인데, 과연 거기에 대한 움직임은 뭐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4대 부문의 개혁은 아주 심플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아, 이거다’ 그래야 이에 대한 성과와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금융개혁도 한다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전부 돈 빼고 나가고 철수하고 있는 판에 무슨 금융개혁을 하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국제금융센터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제금융센터에 텅빈 사무실이 많아요. 이래 놓고는 한 쪽에서는 뭐 금융허브다 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국경제학회가 진짜 짚어줄 것은 과감히 짚어주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좋은 말씀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한국경제학회 보고 연구해 보라고 하시네요. 진념 전부총리님께서 젊으셨을 때는 솔직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조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성근 위원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 하성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저는 대외적인 환경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내적인 것 위주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계 각국은 각자도생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전쟁, 환율전쟁, 통화전쟁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이전하고는 다른 굉장히 공세적이고 우선 자기 뒀을 먼저 챙기려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수출 의존도, 금융 개방도를 보면 대외적인 환경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나 개혁문제와 연관시켜서 보면 결국은 개혁을 하려면 이해상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나 4대 부문 개혁을 하려면 결국은 합심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국제적인 환경에서 다른 나라에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나 환율정책을 펴고,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펴고, 수출지원 정책을 펴는데, 우리가 제대로 빨리 움직이지 않고 새로운 적응을 못하면 완전히 실패한다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확실한 대의명분을 가질 수 있고 좀 더 합의를 해서 뭔가 움직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진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책이 상당히 많이 실패한 경우가 많고 규제가 많으며, 이 책임은 우리 국가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이것도 일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지순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잘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시는 것 같고, 또 일부는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너무 규제를 많이 만들고 안 푼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학계에서 잘 좀 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보건데 학계는 어차피 중장기 연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5년 후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도 똑같은 대화가 오고갈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외국인투자 옴부즈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투자업체가 1만 7,000개 되는데 그 중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약 4,000개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충을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하소연하는 것을 보면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인드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해법을 찾겠습니까. 5년 후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지식인들은 항상 ‘경제적 지대(rent)’를 집요하게 추구하지요. 이 부분부터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수출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이만큼 커왔는데도 수출만 잘하고 수출하는 사람만 애국자예요. 수입하는 사람은 매국노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후진국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벌어서 나가면 ‘먹튀’라고 비난을 하니 그 사람들이 와서 투자할 인센티브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장을 자체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될 수 있는 대로 실업을 좀 내리고 신성장동력을 키워가는 겁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엔 반기업정서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건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 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발상을 바꾸어야 되는 거지요. 그거 안 하고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해법은 없습니다. 만일 학계가 할 수 있다면, 이런 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5년,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제가 지배구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통계적 연구에 의하면 근래에 아이디어를 내서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집행하기 시작할 때까지 3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변화에 대해 전 세계가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도 의사결정이 좀 빨라져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변화하는 세계

에서 우리가 신속대응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지배구조, 의사결정 과정을 바꿔야 미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되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전혀 무의미합니다. 1부에서 이만우 의원께서 페이고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걸 국회법안에 상정했지만 쳐다보는 사람도 없다는 것은 문제죠.

### ○ 이지순 (서울대 명예교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인데 저도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가운영체제가 단기성과 위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임기 내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겠다는 정권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는 흔들림 없이 끌고 갈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 변화를 보면 소위 녹색신산업에서 우리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녹색성장을 강조하던 MB 정부가 창조경제를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관심사에서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좋은 정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이 20분 정도 지나서 더 하실 말씀이 많더라도 이것으로 끝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학회에서 크게 마음을 먹고 ‘우리 경제 전체의 현재, 미래 그리고 정책’ 아주 대단히 큰 주제로 좋은 분들 모시고 좌담회를 계획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현재 상황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응을 잘하고 있느냐? 그것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미래 먹거리를 잘 찾고 있느냐? 그것도 좀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시적인 정책도 부분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포용적 성장과 같은 아이디어들도 나왔습니다. 마침 서울공대 교수들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그 연구에서는 기업이 망해가는 단계를 5개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망해가는 네 번째 단계의 현상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아까 진념 부총리께서 제안하신 대로 한국경제학회에서 좀 분발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잘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